

POLITICS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전남도, 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 '온 힘'

“전남 사찰 방염포 비치 안돼” 최선국 도의원 “장비 도입을”

최근 대형 산불로 전통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전남 도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 주요 시설에 화재 대응 방염포가 단 한 곳에도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국(더불어민주당, 목포1·사진) 전남도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문화유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방 장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따르면 지난해 8월 전남 장흥의 한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로 도 지정 문화재 제171호 “미륵사 석불” 등이 훼손됐으며, 복구 비용만 2억원이 소요됐다.

전남도는 문화유산 보수와 재난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일부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로 화재 위험이 높은 사찰 106곳 가운데 방염포가 비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최근 경북 산불 현장에서 방염포가 문화재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가 있었다”며 “전남 역시 산불·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방염포와 같은 장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요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재난방지 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방염포 구비 및 재난방지시스템 개선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김인정 도의원, 확대 촉구

김인정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사진)은 최근 2025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 자금 예산 증액과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전세 사기 피해를 위해 가구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도청 인근 주거복지센터에서 사기 피해 및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생활안정자금 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4월 기준 6500만원이 지원됐고, 상담 프로그램은 도청 근처 전남도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최근 2년(23년 6월~25년 2월) 간 979건이며, 피해액은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 중 46.7%가 광양, 22.1%가 순천에 거주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이 동부권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900억원이라는 엄청난 피해 규모에 비해 생활안정자금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이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정도가 동부권에 거주하는데 생활안정자금 사업 신청 및 상담 창구는 서부권에 위치해 있어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전남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생활안정자금 사업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문명의 이웃들’ 주제 8월 30일부터 두 달간 대장정 김영록 지사 “젊은 기운...협하고 역동적 전시 연출”

전남도가 ‘문명의 이웃들 somewhere over the yellow sea’이란 주제로 8월 30일부터 두 달여간 펼쳐질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시·홍보 마케팅 등 분야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전남도는 21일 도청에서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윤재갑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은 수목비엔날레에 대한 추진 방향, 전시관 구성 및 연출, 공식행사, 홍보 마케팅, 지역작가 프로그램 등 단계별로 상세히 검토하고, 전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안 등을 고려해 비엔날레를 차질없이 치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2025 전남국제

수목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이란 주제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진도, 해남 등 전남 일원에서 펼쳐진다.

‘수목으로 그리는 세계의 새로운 중심’을 목표로 국제적 작가 팀랩(teamLab)을 포함해 20개 나라 80여 작가가 참여하는 수준 높은 전시, 수목 퍼포먼스, 찾아가는 수목특강, 작가와의 대화 등 국내외 관람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풍성한 수목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4회 비엔날레는 1~3회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젊은 기운이 느껴지도록 협하고 역동적인 전시 연출을 통해 수목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관심을 갖고 찾는 열린 전시가 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오후 도청 서재발실에서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준비상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전시, 행사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을 주제로 20개국 82명 작가가 참여해 오는 8월 29일 개막, 10월 31일까지 목포, 해남, 진도 일원에서 2개월간 진행된다.

“완성도 높고 세련되면서 역동적인 전시회를 통해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성공적인 비엔날레로 치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 남은 기간 조속히 보완해 내실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전남 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 대선 공약화 총력

도, 국회·각 정당 매주 접촉...미래성장 이끌 정책과제 건의

전남도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역 핵심 현안을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는 21일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이 국회를 방문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정합’의 상임공동대표 허민 전남대 교수와 민주당 호남권 정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도걸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전남지역 대선공약 건의 과정을 설명했다.

허민 교수는 ‘성장과정합’에서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등 핵심 정책분야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의 국정운영 비전과 공약 설계의 중심역

할을 맡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예산실장 출신으로, 지역 예산, 정책과제와의 연계성이 높은 국회의원이다.

전남도는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총 76개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특히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 등 20개 핵심 과제를 집중 건의했다.

또한 미래항공모빌리티 연계 남부권 초광역 항공 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 추가 지역발전 과제 36건, 국가출생기부금단 신설 등 제도 개선 및 국정 제안 과제 20건의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한 접촉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국회를 매주 방문해 전남 지역 및 출신 국회의원과 의정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원내 정당의 전남도당과 국회 정책위의장실을 통한 정당별 맞춤형 공약 건의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윤진호 실장은 “이번 조기 대선은 전남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중요한 계기”라며 “전남도는 앞으로 각 정당과 후보자, 국회의원과 의연계를 강화해 전남의 미래 성장 기반이 국가 정책과 연결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 출범...청년일자리 의결

청년창업 지원 등 780억 투입 공제사업 200명→500명 확대

신규위원 위촉...25명 구성

“다양한 목소리 정책에 반영”

광주시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광주시 제5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5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청년활동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2025년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5기 위원회는 광주시장을 비롯한 당원직 실·국장과 제4기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위원 1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신규위원에는 이승우 위원, 부위원장은 이현남 위원이 선출됐으며, 이들의 임기는 2027년 4월 17일까지 2년간이다.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조례에 기반한 청년정책 심의기구로, 지난 2016년 시작했다. 청년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김기정 광주시장이 21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5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신규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참석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은 취업역량 강화, 맞춤형 일자리, 청년창업 지원, 지역정착 도모, 관계기관 협력 등 5대 분야에 780억원을 투입, 1만7400여명을 대상으로 고용 촉진과 취·창업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사업’ 지원대상을 지난해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광주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이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추가 적립해 청년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미취업 청년의 구직 단념 사전예방 및 일사 초기 청년의 ‘쉬움’ 방지를 위해 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운영과 직장 적응지원 사업도 확대, 청년들의 취업을 직

접했다. 전남도는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한 접촉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국회를 매주 방문해 전남 지역 및 출신 국회의원과 의정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원내 정당의 전남도당과 국회 정책위의장실을 통한 정당별 맞춤형 공약 건의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윤진호 실장은 “이번 조기 대선은 전남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중요한 계기”라며 “전남도는 앞으로 각 정당과 후보자, 국회의원과 의연계를 강화해 전남의 미래 성장 기반이 국가 정책과 연결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형배, 한국문화기술 연구원 설립법 대표발의

“문화예술·첨단기술 결합 ‘경쟁력 극대화’...광주 설립 시급”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연구·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이하 CT연구원)을 설립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21일 문화기술 연구·개발 킷트플터인 CT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항공우주기술(ST) 등 타 분야는 각각 전문기관이 존재하나, 현재 문화기술(CT) 분야만 전문연구기관이 없다.

CT연구원 설립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도 포함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18년째 담보 상태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연구기관 통폐합



을 이유로 흐지부지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CT연구원이 아닌 CT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명맥만 유지하도록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

실제 CT연구소는 적은 예산과 비전문적 운영으로 전남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최근 ‘자브리 밈’ 열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Culture)과 첨단기술(Technology)이 결합할 때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K-문화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인 CT연구원 광주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국회에서 광주 국회의원 8명 전원이 공동주최한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박필순, 광주 싱크홀 지도 공개...총 154건

광산구 39.6% 가장 많아...도시철도 역사·구시가지 밀집

박필순 광주시의원(민주당·광산구3·사진)은 21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싱크홀 현황을 바탕으로 제작한 ‘광주 싱크홀 지도’를 공개했다.

최근 광주 곳곳에서 싱크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광주에서 총 154건의 싱크홀(지반침하)이 발생했으며 인적피해는 2건, 차량피해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산구가 6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구 31건, 서구 27건, 북구 22건, 남구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남광주역(9건)과 금남로4가역(4건) 등 도시철도 역사 인근과 광산구 월곡동(10건), 비아동(9건), 화정동(9건) 등 구시가지 지역에 싱크홀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장은 싱크홀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함에도 광주시는 아직까지 한 건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사고 발생 후 추모하고 사후 조치만 하는 정치는 책임 있는 시민들의 안전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이어 “광주는 노후 하수관과 지하 도시철도 건설이 겹치는 등 지반침하에 취약한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취약지점을 집중 관리하고, 공개된 안전지도도 활용해 시민들과 함께 대응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하안전법 제35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지정·고시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 있다”며 “여기에서 ‘시장’이란 기초자치단체장제를 말하며, 광주시의 경우는 구청장이 지정·고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